

ILO 정부안 철회, 법외노조 즉각 취소 투쟁을 조직해야

문재인 정부는 ILO 협약 비준에 따른 노동법 개정 정부입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ILO 협약 정부안은 사용자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개악안이다.

노동자 단결권을 보장해 준다고 했지만 정작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 간접고용 노동자의 원청 사용자성 인정은 빠져 있다. 오히려 사용자 측의 요구인 사업장 점거 금지와 단협기간 3년 연장 등의 개악안을 포함시켰다. 게다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등의 요구로 더욱 개악될 수도 있다.

그래서 민주노총은 일고의 가치조차 없는 “개악안”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은 파탄났다”고 선언했다.

물론 정부안은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그래서 전교조 본부는 “교섭창구 단일화”와 같은 독소조항을 뺀다면 정부안을 “수용”해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기대를 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다 보니 전교조 본부는 ILO 협약 정부안을 개악안이라고 규정하지만, 정부안을 철회하라고 분명하게 요구하지는 않는다.

민주노조 운동은 지난 1997년 노동법 개악 반대 투쟁 이후 민주노총과 전교조의 합법화(이조차 1.5권에 불과)를 받고 노동법 개악을 수용한 바 있다. 그 결과



정리하고, 변형근로제, 파견제로 비정규직이 대폭 늘어났다. 그 뼈아픈 경험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정부의 분리 대응에 전교조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 전교조는 ILO 협약 정부안이 개악이라고 규정할 뿐만 아니라 이를 철회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교섭보다는 투쟁

전교조 본부도 밝혔듯이 하반기에는 “10월, 11월 국회가 각종 규제개혁안과

노동개악안 등 모든 노동관련법 요구와 개악을 위한 입법이 맞물리는 대격돌이 예상된다.”

그러나 전교조 본부는 유은혜 교육부장관이 교체되기 전에 “교섭 통로를 마련하고 교육현안 과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다”면서 정부와의 협상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본부 스스로 언급하듯이, 전교조가 국가교육회의, 시도교육감 협의회와 다양한 형태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현재 뚜렷한 성과와 영

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데 말이다.

법외노조 취소를 비롯해 성과급과 교원 평가 폐지 등 각종 교육 현안은 정부와의 정책 협의로 풀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전교조는 하반기 ILO 협약 비준, 노동개악 저지와 함께 법외노조 즉각 취소와 해고자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투쟁을 힘있게 조직해야 한다. 그 출발로 10월 24일 교사 결의대회, 11월 9일 전국 교사 대회를 실질적이고 대중적으로 조직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전교조 기간제 교사 교섭 의제

정부의 정책과 별 차이 없는 문제적인 안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를 분명히 해야

전교조 본부는 하반기 단체교섭 요구 중에 기간제 교사 관련 내용도 발표했다.

여기에는 ‘학급수 감축, 한시적 과목 운영 등을 근거로 정규교원 정원을 장기적으로 확보하고 있지 않은 학교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런데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는 요구하지 않은 채 단지 정규직 교사채용만 요구하고 있다.

이는 현재 일하고 있는 ‘정원의 기간제 교사’의 해고를 요구한 것과 다름없다.

문재인 정부가 이미 2017년에 기간제

교사를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면서도 “정원의 기간제 교원의 해소를 위해 정규교원의 정원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사실상 같은 내용이다!

게다가 더 다수를 차지하는 ‘휴직 대체 기간제 교사’ 등의 문제는 아예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전교조 본부는 기간제 교사 제도를 용인하고 있기 때문에 교섭 의제에 포함된 기간제 교사의 노동조건과 복지 개선 요구들도 큰 실효성이 없을 것이다. 기간

제 교사 차별 대부분은 불안정한 고용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전 전교조 집행부는 기간제 교사의 ‘일괄적이고 즉각적인 정규직화’에는 반대한다며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 요구를 반대해 사회적으로 큰 실망을 자아낸 바 있다.

그러나 전교조가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를 지지하지 않으면 정규직 교사들의 조건을 방어하기도 쉽지 않다.

정부가 발표한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은 2030년까지 교사 선발 인원을 지금의 반 토막으로 줄임으로써, 교사 정원을 10년간 수만 명 줄이는 “역대 최악의 교원 수급

대책”(전교조)이다. 정부가 기간제 교사를 계속 이용하는 이유도 손쉽게 교사 정원을 감축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정규 교원 확충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려면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 투쟁과 맞물릴 때 더욱 효과를 낼 것이다.

지금 기간제 교사들은 정부에 맞서 투쟁하며, 기간제 교사도 성과급과 1정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성과를 냈고, 호봉 차별 폐지를 요구하며 싸우고 있다. 전교조 교사들은 기간제 교사의 투쟁을 지지하고 연대해, 비정규직 없는 학교를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한다.

전교조가 배이상헌 교사 방어에 나서자

경찰은 배이상헌 교사 수사 중단하라!

광주시교육청은 수사의뢰·직위해제 철회하라!

수업 중 성평등 교육을 한 전교조 조합원이 황당하게도 '아동학대 범죄 피의자'로 내몰려 경찰 소환조사를 앞두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제정자문위원을 지낸 바 있고, 학교 현장에서 학생자치, 학생인권, 성평등 교육을 오랫동안 실천해 온 배이상헌 교사가 그 당사자다.

수사에 착수한 광주 남부경찰서는 성평등 단편영화를 틀어 준 행위가 아동복지법 제17조 2호(성적 학대행위) 또는 5호(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조사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밀폐된 교실에서 강제로 영화를 봐야 하는 상황이었는지 여부도 고려 대상'이라고 한다. 도덕 교과 과정에 맞춰 다수의 학생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교실 수업을 마치 범죄 행위인 양 취급한 것이다.

수사를 의뢰한 장본인은 어이없게도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이다. 배이상헌 교사에게 제기된 민원은 은밀한 공간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추행 했다가 성적인 요구를 했다는 게 아님에도,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중죄'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경찰에 넘긴 것이다. 소명 요구도 묵살된 채 수업 영상과 몇몇 발언을 이유로 직위해제를 통보 받은 배이상헌 교사와 그 가족은 수업 배제, 급여 삭감, 정신적 고통 등 여러 어려움을 감당하고 있다.

문제가 된 영화 <억압받는 다수>는 프랑스 여성감독 엘레오노르 푸리아가 연출한 것으로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뒤바꾼 방식으로 여성 차별의 현실을 담았다. 전교조 여성위를 비롯한 몇 여성단체들의 추천 영상이기도 하다.

일부 학생은 해당 영화의 표현 방식에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지만 그것이 곧 성희롱일 수는 없다.

그 영화가 중학생의 발달 단계에 맞지 않는 교재라는 비판도 있다. 그러나 이는 교사들과 학생들이 토론하며 소통할 일이



지 '성 비위'로 몰아 경찰 수사의 제물로 바칠 일이 아니다.

일각에서는 젠더권력과 학생-교사 관계 관계를 제기한다. 그러나 교사라면 남성이든 여성이든 누구나 성평등을 가르치고 학교가 성평등한 공간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2018년 학생의 날에 "이제는 성평등을 배우고 싶다"는 스티커를 부착하고 '스쿨미투 집회'에 참가한 학생들의 외침을 남성 교사들은 외면하란 말인가.

정당한 비판

광주시교육청은 '성희롱, 성폭력 대응 매뉴얼'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돌아보아야 한다. 해당 매뉴얼은 피해 호소 학생의 진술을 검증하는 최소한의 확인 없이, 교육청에 신고가 접수되면 모두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직위해제를 한다. 수사 결과 무혐의 처리돼도 '공무원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한다. 이 때문에 고초를 겪는 교사가 광주에서만 수십 명에 이른다.

지난해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전북의 고송경진 교사의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교육청의 칼날에 그 어떤 교사가 자유로울 수 있겠는가. 광주시교육청은 국가의 억압기구인 경찰의 힘을 빌려 자의적인 관료 행정을 정당화하지 말고 배

이상헌 교사의 직위해제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

어떤 교사를 성범죄자로 몰아 사용자(교육청)와 국가(경찰과 검찰)의 제물이 되게 만드는 광주시교육청의 매뉴얼은 스쿨미투의 애초 취지를 퇴색시킨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일반으로 학생들의 피해호소 중에는 정당한 것들이 많고, 당사자의 불쾌함은 진중하게 고려되어야 하나 이것을 절대적인 근거로 적용해 일률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학교 자체가 워낙 권위주의적인 곳이므로 숨 막히는 학교생활에 대한 불만이 교사들로 향하기도 쉽기 때문이다.

한편, 배이상헌 교사가 직위해제 항의 투쟁에 나선 지 한 달이 넘어가는데도 전교조 본부와 여성위가 배이상헌 방어에 나서지 않는 것도 문제다. 광주시교육청의 부당한 조치에 힘을 실어 주는 효과를 내기 때문이다.

진보 교육감이라 해도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는 노동조합이 독립적으로 비판하고 과감히 맞서 싸워야 한다. 게다가 광주시교육청의 매뉴얼은 올해 2월 교육부 매뉴얼에도 반영돼 이미 전국의 교사들에게 적용되고 있다. 배이상헌 교사 사례를 접한 교사들은 수업 때 틀어준 영상과 발언

을 돌이켜 보며 아찔함을 느꼈을 것이다. 학생이나 학부모가 민원을 제기하면 사실관계 확인 없이 직위해제가 된다고 생각해 보라.

학생들의 문제 제기를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유로 교육청의 부당한 행정조치, 직위해제 등에 침묵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성 관련 민원 뒤에 숨어, 국가기구의 일부인 교육청이 교사의 수업 내용을 징계하고 사법 당국에 넘기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2018년 4월 전교조는 '교육부의 교육 분야 성희롱 성폭력 근절 대책 발표에 대하여'라는 논평을 낸 바 있다. 여기서 "(성평등 교육) 노력을 아끼지 않는 교사들은 일상적으로 파면·해고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민원과 법적 소송 등 고통을 당하기 일쑤다"고 지적하며, "성평등 교육 교사에 대한 부당한 공격을 수수방관"해 온 교육부를 비판하고 "교사 보호 대책을 수립"하도록 촉구한 바 있다. 따라서 배이상헌 교사를 방어하는 것이 일관된 실천일 것이다.

올해도 전교조광주지부, 전국도덕교사모임, 광주참교육학부모회,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등은 광주시교육청 규탄 성명을 내고 한 달 넘도록 1인 시위와 항의 집회를 이어 왔다. 문제의 심각성이 알려져 광주뿐 아니라 전국의 활동가들도 '성평등 교육과 배이상헌을 지키는 시민모임'에 함께하며 광주시교육청의 행정 조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공권력이 교사 노동자의 수업을 탄압하고 통제하는 것을 노동조합이 나 몰라라해서는 안 된다. 성평등 교육에 앞장서 온 배이상헌 교사에 자행된 부당한 징계에 맞서 전교조 본부도 적극 싸워야 한다.

배이상헌 교사가 더 고초를 겪지 않고 수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전교조 교사들이 앞장서서 지지하고 연대를 보내자.

이 글은 8월 19일 노동자연대 교사모임이 발표한 성명서를 증보한 것이다.



노동자 정치 신문

wspaper.org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노동자 연대
Workers' Solidarity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주요 기사

- ★ 성평등 수업을 경찰 수사로 넘긴 광주시교육청 규탄한다 경찰은 배이상헌 교사 수사 중단하라
- ★ 9월 국회에서 노동계약 추진
- ★ 계급 불평등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조국 딸 의혹
- ★ 국정원은 보안경찰 : 또 공안 사건 조작 시도
- ★ 노동자 양보 강요할 2기 경사노위도 반대해야
- ★ 건설노조 토목건축 노동자 파업
- ★ 한일군사협정 종료 통보와 한미동맹

구입하고 정기구독 · 후원해 주세요

앱 · 텔레그램 구독

안드로이드 알리미
<https://wspaper.org/s/app>
텔레그램 구독
<https://wspaper.org/s/tg>